

도의회 임시회 개회

23일까지 의정활동 돌입... 행감계획안 등 안건 처리키로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가 12일 제 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는 23일까지 행정사무 감사 계획 수립, 도정 및 교육 학예행정에 관한 질문,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76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도시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

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김제 용지 정착농원 새만금사업법상 특별관리지역 지정, 댐 관리 부실로 인한 수해의 진상조사 및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진정당한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재학생 수능 응시수수료 폐지등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13일 2차 본회의에서는 김대중

(정읍2), 김만기(고창2), 최훈열(부안), 한완수(임실), 김정수(익산2) 의원 등 5명의 의원, 14일 3차 본회의에는 강용구(남원2), 황의탁(무주), 이병철(전주5), 송성환(전주7), 최찬욱(전주10)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11월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 수립과 각종 조례안 21건, 소관 실국별 출자·출연 동의안을 포함, 71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유호상 기자



12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6회 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 송하진 도시사와 김승환 교육감, 도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송지용 도의장, 필수노동자 응원 캠페인 동참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이 보건의료와 돌봄·청소 등 대면노동을 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에 응원메시지를 전달하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송 의장은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계셔야 하는 분들이 필수노동자인데 우리는 이들의 노고에 대해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며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상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고3 재학생 수능 응시 수수료 폐지"를

김기영 도의원



전북도의회 김기영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익산3)이 고3 재학생의 수능 응시 수료를 징수 폐지를 촉구하는 구두가 주목된다. 김기영 의원은 내년부터 초·중·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지만 무상교육의 취지에 위배되는 수능 응시 수수료 제도가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수능 응시 수수료는 수능 시험을 치르기 위해 납부하며 2021년 기준 재학생 수능 응시생은 29만 명으로 4과목을 응시할 때 수수료는 136억 원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가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을 전면 확대하고, 고등학교 수업료 등을 없애는 것과 비교할 때 수능 응시 수수료 징수 역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학생들이 수능 응시 수수료 부담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김제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 지정을"

황영석 부의장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상류지역의 주 오염원인 축산오염원의 원천적 저감을 위해 김제 용지 정착농원을 새만금사업법상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황영석 부의장(환경복지위, 김제1)은 12일 제376회 본회의에서 김제 용지 정착농원 새만금사업법상 특별관리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환경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타당성 용역의 신속한 마무리와 함께 김제 용지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제 용지지역의 경우 과거 정부의 한센인 이주정책과 함께 축산업이 장려되며 정착농원들이 들어섰다. 이후 그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며 인근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째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 및 환경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다. 황 의원에 따르면 "김제 용지지역의

경우 인근에 전주, 완주 혁신도시가 들어서며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지역의 용양천이 새만금호 근접 하천이다 보니 용양천에 유입된 축산 폐수가 새만금호 수질개선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시민 사회단체 및 정치권을 중심으로 새만금 해수유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새만금 수질은 새만금 호내 뿐만 아니라 상류지역의 문제 또한 함께 해결돼야 한다"며 "현재 새만금 수질의 경우 상류와 하류 모두 목표수질을 장담하기 어렵고 근본적으로 상류 수질개선이 없이 하류의 수질개선은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새만금 수질개선과 관련된 많은 연구결과를 보면 상류지역의 주 오염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축산오염원이다.

새만금사업법 제32조에서도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수해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해야"

이정린 도의원, 건의안 발의



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1)이 댐관리 부실로 인한 진상조사 및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집중호우(7월 28일~8월 11일)로 인한 피해규모는 역대 다섯 번째로 태풍이 아닌 호우피해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문제는 이번 8월의 수해가 온전히 천재였던 것이 아니라 댐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소 관 부처인 환경부의 부실한 대처가 촉발시킨 인재였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재난지원금 상향 등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주택, 농경지 및 농작물 등

사유시설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보상수준과는 차이가 크다.

반면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정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포항지열발전사업이 촉발한 인재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돼 피해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8월의 홍수피해 역시 수자원관리 당국의 부실한 댐관리와 홍수통제소 인제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홍수피해 진상조사와 피해주민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포항지진특별법과 같이 국가차원에서 보상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이정린 의원은 "환경부 댐 관리 조사위원회는 댐 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라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수해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국가가 먼저 나서 수해피해 주민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피해 주민의 깊은 상처와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제주4.3 사건 해결 개정법안 조속 처리를"

도의회, 국주영은 의원 발의 촉구 건의안 채택 국회 계류중인 개정법안, 추가 진상조사 포함 희생자 보상·불법 군법회의 판결 무효화 등 담야

전북도의회가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희생자 및 유족들의 뜻을 반영한 '4.3사건법 개정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 나갔다.



도의회는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주영은 의원(전주9,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국회 계류 중인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주영은 의원은 "제주 4.3사건"은 현대사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학살사건으로 지금까지 파악된 희생자와 유족은 9만4,98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민의 인권을 침해했던 중대한 역사적 사실인 '제주 4.3사건'은 2000년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하 '4.3사건법')이 제정되면서 공식적인 진상조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희생자 및 유족들과 제주 도민은 피해 당사자로서 구제받아야 할 권리나 피해 회복에서 국가가 그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게다가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해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어, '4.3사건법' 개정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은 물론이고 보상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주 의원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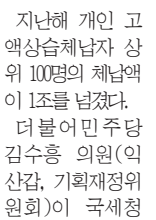
이에 따라 국주 의원은 지난 7월 27일 국회에 제출된 '4.3사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돼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이 이뤄져 잊혀진 우리 국민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사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을 명확히 하고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불법 군법회의 판결의 무효화, 4.3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해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뜻을 반영한 '4.3사건법' 관련 개정안이 통과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유호상 기자

"작년 고액상습채납자 상위 100명 체납액 1조원 넘겨"

민주 김수홍 의원, "2017년부터 매년 증가"



지난해 개인 고액상습채납자 상위 100명의 체납액이 1조를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익산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제청에서 제출받은 '2019년 개인 고액·상습채납 공개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개인 고액상습채납자 중 상위 100명이 체납한 세금이 1조1,056억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 국제청이 공개한 개인 고액·상습채납자 수는 총 4,739명, 체납액은 3조8,530억이다.

개인 고액채납자 상위 100명의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0.8%, 2018년 16.7%, 2019년 28.7%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상습채납자 중 상위 100명에 대한 추적조사 및 징수 강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수실적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체납액 상위 100명에 대한 징수실적'을 보면, 2019년 76명에 대해 295억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한편 체납액 상위 100명을 보면,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4,367억원이었다. 이 중 온라인 도박 운영을 하고 있

는 홍00씨가 총 1,632억을 체납하며 체납최고액을 기록했다.

부동산담대입에 종사하는 사람도 4명이나 포함됐다.

연령별로 보면 30대미만 고액상습채납자가 늘고 있다.

2017년 2명에 그쳤던 30대 미만의 고액상습채납자가 지난해 10명으로 증가했다.

체납액도 2017년 98억원이었으나 2019년 798억으로 700억이나 늘어났다.

김 의원은 "지난해 고액상습채납자 상위 100명의 체납액이 1조를 넘었음에도 실질적인 징수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추적조사 및 징수를 강화하고 성실납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5년동안 정정보도 게시 결정 단 5건"

민주 한병도 의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지난 5년간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을 단 5건 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정북 익산)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지난 5년간 처리된 4번의 주요 선거에서 총 1,034건을 심의했고 그 중 정정보도문 혹은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은 단 7건(0.67%)에 불과했다.



선거별로 보면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에서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7회 지방선거와 올해 총선에서는 각각 2건과 3건이 있었다.

특히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만 2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게재 수위가 낮은 공정보도문요청은

649건(62.7%)에 달해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의원은 "인터넷 매체의 증가와 가짜뉴스의 전파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반면 실효성 있는 제재 결정과 신속한 이의신청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중앙선거위는 제재 조치 상황을 조속히 검토하고 신속한 구제를 통해 불공정 선거보도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직원 국외 유학 후 퇴직 사례로 변질"

민주 김윤덕 의원, 교통안전공단 직원 국외 유학 특전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국외 유학 제도가 유학 후 곧바로 퇴직하는 사례로 변질된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 유학 현황에 따르면 국토부 소관 25개 공공기관 중 8개 기관이 국외 유학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귀국 후 의무 복무 기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단이 유학 기간 중 임금 50%가 지급되지만 학업, 연구 등의 사유가 아닌 단순 체류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관명태도 임

금과 유학비용을 환수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외 유학 제도의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월 1일~2020년 5월 31일 약 2년간 미국에서 유학 후 추가 휴직 신청 제출했지만 학업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로 증명자료가 없어 인사위원회에서 휴직 연장 불허에 따른 사직원 제출을 했다.

국토부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법 제39조 국외훈련비 지급, 제41조 국외 유학을 위한 휴직, 제42조 국외훈련 공무원의 복무의무에 따르면 100분의 20명위내에서 환수조치와 훈련기간 2배에 해당하는 복무를 하도록 돼 있다. /유호상 기자

민주 전국농어민위원장에 이원택 의원 선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지난 10일 95.30%의 지지를 받아 당 전국농어민위원장에 당선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의원은 지난 9월 말 '농어민에게 희망이 되는 민주당'을 모토로 민주당 농어민위원장에 단독 출마했다. 이어 지난 6일 개최된 민주당 전국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수해, 태풍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농어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새로운 농경 틀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선거인단으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유호상 기자